

# 금타 화재 3일째 대기 중 유해물질 수습종 검출 확인

광주시, 비공개했던 영산강환경청 VOCs 59종 측정자료 뒤늦게 공개  
2가지 이상 물질 동시 노출시 유해성 증가 가능성에 안일한 대처 지적  
전문가들 “유해물질 노출량·시민 건강 영향 등 파악해 대책 마련해야”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시민 알권리를 보장 한다면서도 자의적으로 선택, 공개해 비판을 받자 뒤늦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발생 이후 측정된 대기오염물질 항목별 수치를 공개했다.  
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광주시 등의 애초 발표와 달리, 금호타이어 화재 발생 이후 대기 중 수십 가지 종류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가지 이상의 유해물질이 동시에 유출됐을 경우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느슨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가 28일 오전 9시 30분께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9종에 대한 측정 자료 전체를 공개한 결과, 금호타이어 화재 발생 이후 평소 검출되지 않던 유기화합물들이 사흘째인 지난 19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일제히 검출되기 시작했다.

석유제품이 탈 때 나오는 독성 화합물 ‘아크로레인’(0.030ppm), 메탄올(0.031ppm), n-노네인(0.011ppm), 벤젠(0.041ppm), 클로로포름+디클로로메탄(0.016ppm), 에틸렌옥사이드(0.012ppm), 자일렌+에틸벤젠(0.008ppm), 메틸싸이클로펜탄(0.010ppm) 등이 잇따라 확인됐다. 1-헥산, 싸이클로헥산, 메틸싸이클로헥산, 이소프렌, 아세톤, 아세트알데히드, 염소, 메틸삼차부틸에터 등도 이 시각을 기점으로 검출량이 나왔다.

아크로레인의 경우 환경청이 임시방편삼아 적

용했던 TWA(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 기준인 0.1ppm에는 미달했지만 미국 환경보호청이 정한 급성노출가이드레벨(AEGL)의 1단계(0.03~0.27)에 육박했다.

AEGL은 산업재해, 화학사고, 테러 등으로 인해 일반 대중이 단시간 고농도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를 가정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대응하기 위한 기준이다.

AEGL 1단계는 ‘어떤 물질에 대해 일반 대중(민감한 사람 포함)이 불쾌감, 자극 또는 자극되지 않는 경미한 생리적 영향을 경험할 수 있는 공기 중 농도’다. 나머지 물질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사고로 유출될 경우 표기된 측정치보다 유해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산업계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TWA 노출기준에 대한 고시로 ‘2중 또는 그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 유해인자의 상가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 환경청도 ‘화학물질독성노출기준’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 상가적(additive), 상승적(synergistic), 길항적(antagonistic) 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AEGL 값을 적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가 선불리 ‘안전하다’, ‘미미한 수준’이라고 시민들에게 근거없는 안도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방화문 작동 잘 되나요? 28일 광주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과 안전관리 자문단들이 신안동의 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방화셔터 작동 유무 등 소방,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전문가들은 또 이들 기준은 애초 이번 화재 현장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데 쓰일 수 없는 지표라고 지적한다.

TWA는 작업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져 대기오염의 평가 등 지표로 쓸 수 없으며, AEGL도 미국인의 건강자료를 기반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한국인의 생리학적 특성 및 국내 노출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동시다발적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그 위험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 없이 ‘미미한 수준’

이라고 측정 결과를 공개해 시민들에게 선불리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소수의 유해물질만 측정하고 복합적 노출 경로와 단기간 급성 노출에 대한 영향을 판단할 수 없다면 건강 확인에 한계가 있다”면서 “어떤 물질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노출됐는지, 이로 인해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해야 주민 건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 영무토건 법정관리 신청

광주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영무토건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무토건은 지난 20일 광주지법 파산1부(부장판사 유석동)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영무토건에 대한 채권자는 318명 접수됐으며, 재무제표상 부채 규모는 790억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은 지난 27일 영무토건에 대해 법정관리에 따른 포괄적금지명령을 공고했다. 법인 회생 절차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채무자 영무토건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다.

영무토건에 대한 회생절차 첫 심문 기일은 다음 달 25일로 예정됐다.

영무토건은 지난 1998년 광주·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한 건설업체로, 지난 2002년부터 아파트 브랜드 ‘영무에다움’으로 전국 각지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해 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는 111위를 기록했다.

영무토건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광주시 대표 도서관, 광주시 남구 주월동 주상복합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시 동구 호남동 호텔, 영광군 백수읍 호텔, 광양시 의암지구 영무에다움, 나주혁신 영무인더스 1·2차 오피스텔 등을 건축할 예정이었다.

영무토건과 아파트 브랜드를 함께 쓴 영무건설은 홈페이지 공지지를 통해 “영무건설은 영무토건과 ‘영무에다움’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만 공동 사용했을 뿐 현재는 법인의 소재지, 자본 관계, 사업 연관 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트럼프도 탐낸 K-조선... 현실은 ‘노동자의 무덤’

영암대불산단 끊이지 않는 사고  
올해만 9명 사망... 외국인도 2명  
중대재해 위기경보 ‘심각’ 격상

대규모 조선사업장 HD현대삼호를 비롯해 조선업 협력업체가 밀집한 영암대불산단 내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조선 협력 방안이 거론되며 호황기를 맞이했음에도, 열악한 처우와 ‘위험의 외주화’ 등으로 조선해운업의 산재 피해자가 잇따르면서 구조 개선이나 현장 안전관리 감독 강화 등 구체적인 조선소 내 산재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대불산단에는 지난 23일 중대재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 같은 날 대불산단 내 선박 구조물 제작 업체에서 작업자가 16t 지게차에 깔려 숨지면서다.

◇올해도 끊이지 않는 사고... 안전은 뒷전=대불산단에서는 올 들어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1월 17일 한 업체에서 작업자가 환기창 붕괴로 13m 아래로 추락해 숨지고, 불과 하루 뒤인 18일에는 지붕 개량공사 중 채광창이 깨지며 작업자가 4.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3월 8일에는 (주)유일6공장에서 차량과 벽 사이에 작업자가 끼어 숨지고, 같은 달 22일 (주)보원M&P-청마이엔지에서 용접 작업자가 화재로 사망했다. 25일에는 (주)명일에서 크레인 클립프 이탈 사고로 작업자가 자체에 깔려 숨졌다.

지난달 16일 (주)유일6공장에서 태양광 수리 작업자가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고, 같은 달

18일 HD현대삼호중공업 사내업체인 인우산업에서 작업자가 아침 제조 중 쓰러져 숨졌다.

지난 17일도 HD현대삼호중공업 내 용접 전 구조물 고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2.7m 아래로 추락해 치료 중 숨졌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산업재해자는 1만6075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245명에 달했다. 지난 2023년에도 1만4878명이 산재 피해를 입었고 206명이 숨졌다.

◇정부, 인력 핑계로 점검도 결핍=전문가들은 하도급 등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고된 업무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을 지키는 데다, 바쁜 건조 일정에 사업장 내 만연한 하도급으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 현장에 다양한 외국인들이 근무하면서 쉽지 않은 소통 부재가 안전관리 미숙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5년 간 전남지역 등록 외국인 증가율은 7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대불산단 이 위치한 영암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는 968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런데도 고용노동부의 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목포·무안·영암·해남·강진·신안·완도 지역을 관할하는 목포지청만 하더라도 3명의 인력이 259개 일반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노무관리 등을 맡고 있어 사실상 사고 발생 뒤에야 사업장 조사가 이뤄지는 ‘사후약방문’ 점검이 일상화된 형편이다.

김춘호 변호사(광주민중의집 운영위원)는 “고용주가 불법 고용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고 자체를 숨기는 경우도 많다”며 “고용 형태를 투명하게 만들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대불산단에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선업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